

오늘의 주요기사

2023 5 4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2		' 가	'	1
江原日報			, ' 가	...	2
			가		3
			, 가	...	4
			' 가	' ...	5
江原日報	01		'	가	'
江原日報	10			'	
江原日報	10				7
江原日報		[]			8
강원도민일보	16	[]	() ·	()	· ... 8
江原日報	21	[]	()		8
CBS			1	4 3946	9
강원도민일보	02			...	10
江原日報	21	“		...	” 10
강원도민일보	01		'	' 10	11
강원도민일보	03		'	' ,	5
강원도민일보	03		17	· ,	12
강원도민일보	14		43		13
강원도민일보	12	"		"	13
강원도민일보	09				14
강원도민일보	17	[]	·		15
강원도민일보	17	[]			16
江原日報	19	[]	18	가 3% ,	17
江原日報	19	[]		,	18

강원도민일보

2023 05 04 ()
02

광역 최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눈앞



분권G - 우리마을조례

(강원)

최재민 의원 발의 이달 도의회 심의 공공·다중시설 내 주차 편의 기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도민 일보가 기획한 '분권G - 우리마을 조례'로 소개하는 3호 조례(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다.

해당 조례는 5월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이 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재민(원주·사진) 도의원이 발의했다. 강원도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도분



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이 조례가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3년 6월 11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며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화

2023 05 03 ()

江原日報

최재민 강원도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 발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최재민 강원도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주차구역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원주)이 3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청 본청과 소속 기관의 청사를 비롯해 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

최재민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MBC

2023 05 03 ()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조례안 발의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이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자는
강원도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 기관의 청사, 강원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이달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최재민 강원도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제공 조례 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내달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시행



최재민 강원도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제공 조례 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내달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시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국가유공자에 우선 주차구역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민(원주4) 도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도청 본청과 소속 기관의 청사와 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는 병원과 대중교통 이용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

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최재민 강원도의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발의

핵심요약

최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국가유공자 예우 조례"
"5월 도의회 통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기 맞춰 시행 기대"



최재민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재민 강원도의회의원(국민의힘.원주)은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가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3년 6월 11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江原日報

2023 05 04 ()
01

사업제안 단계부터 ‘망상 시유지 가로채기’ 설제

전세사기범 경자청 제안서 단독입수 “짜여진 각본 의심”
노봉해변 등 공시지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비용으로 노려

속보=인천 전세사기범 남모(62·구속 수감 중)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시유지 등을 사실상 무상 또는 헐값에 ‘가로채기’(본보 4월27일자 1면 보도)하려고 했던 계획이 사업제안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이미 설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망상지구 내 노봉해변 등 해안 노른자위 땅을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강제 수용하거나 임대받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실제 사업자 지정 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동해시 등에 ‘무상귀속협약’을 보냈다. 이미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무상 귀속과 관련한 ‘각본’이 짜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강원일보는 남씨가 2017년 6월 경자청에 제출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동해이씨티 개발사업 사업제안서’를 단독 입수했다. 남씨가 강원도, 경자청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한 달 가량 전에 제출한 것이다.

사업제안서의 재무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지구내 포함된 노봉해변과 동해고속도로 동해휴게소 인근을 비롯한 국공유지는 수용, 공공임대, 현물출자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구내 동해시가 소유한 토지는 26만8,843㎡(8만1,325평)로 축구장 37개 면적이다.

노봉해변의 경우 임대 등 토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5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일대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가치가 낮게 측정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봐도 116억5,744만원에 달하는 땅이다. 또 망상동 동해휴게소 인근 땅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동해시에 기부채납한 시유지로 남씨 측은 수용 등의 방법으로 60억원에 확보하겠다고 제출했다. 이 역시 망상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남씨는 노봉해변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동해휴게소 인근에는 고급 빌라와 호텔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싼값에 시유지를 취득,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려 한

것이다. 실제로 경자청은 2020년 7월 동해시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동해이씨티) 실시계획 무상 귀속 관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는 동해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업제안서에 이미 향후 벌어질 남씨의 경매 낙찰을 통한 부지 확보, 사업지구 축소 및 쪼개기를 통한 사업자 지정 기준 충족, 시유지 확보 계획 등이 모두 담겨있었던 셈이다.

최재석(동해) 강원도의원은 “지자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 성공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유지를 내어줬을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 완수를 장담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업체가 주도한 상황에서는 공짜 땅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기영·이하늘·정윤호기자

江原日報

2023 05 04 ()
10



봉의중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핑크셔츠데이’ 춘천 봉의중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핑크셔츠데이’가 3일 봉의중 정문에서 백선옥 교장, 김은경 학부모회장,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보건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5 04 ()
10

평화통일그림전시회 개막

【홍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의 청년분과위원회는 3일 홍천미술관에서 ‘제2회 청소년 평화통일그림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욱 도의원, 최윤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민철홍 홍천교육장,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 용준식·이광재·황경화 군의원, 민병하 홍천농고 교장, 한종원 강원일보 홍천지사장, 전영길 홍천군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평화·통일·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지역 청소년 8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 하위윤기자

江原日報

2023 05 03 ()

[동정] 강정호 강원도의원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4일 오전 10시45분 속초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6회 효(孝) 사랑나누기 한마당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5 04 ()
16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6회 효 사랑나누기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다.



정인교(위원장)·최종현(위원)·강정호(속초) 도의원은

4일 오전 11시 속초시

江原日報

2023 05 04 ()
21

◇강정호강원도의원(속초)



은 4일 오전 10시45분 속초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제16회 효(孝) 사랑나누기

한마당에 참석.

2023 05 03 ()

CBS

강원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4조 3946억원

강원CBS 진유정 기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강원도교육청 제1차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산보다 2518억원 증가한 4조 3946억원이다.

예산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제1공약인 학력 향상 실현을 위해 227억원을 배정했다. 맞춤형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에 83억원, 학생성장향상도 평가문항 개발 9400만원, 자기주도학습역량 신장 등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 191억원 등이다.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 연수, 수학탐구대회 운영지원 등에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편성도 이뤄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각 학교에도 공공요금 폭탄이 쏟아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요금 여파로 추경 편성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 기본운영비의 5%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76억원을 배정했다.

급식실 환기점검 위탁 용역에 3억 8000만원, 폐암건강검진비 지원 2억 3400만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20억원, 학교 전자철판 지원 199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 140억원 등이 추경에 담겼다.

이번 추경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원CBS 진유정 기자

2023 05 04 ()
02

강원도민일보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또 편성... 교육계 갈등 재연되나

1회 추경안에 140억여원 반영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우려
"사립 회계 건전성 우선 확보돼야"
도교육청 "관리·감독 허점 없어"

속보=강원도내 일부 교육·보육계가 반발했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본지 1월 16일자 4면 등)이 2023학년도 1회 추경에 재차 편성, 또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은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2년 연속 추진되면서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1회 추경에는 '사립유치

원 학부모 부담 경감 운영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포함됐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치다. 학부모 부담 경감 운영비 지원은 사립유치원 67곳의 원아 7290명이 대상이다. 원아 1명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학부모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원아 9670명이 대상이다.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40억 436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해당 사업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꼭 필요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한각 한우총 강원지부 지회장은 본지 기자에게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누리고 지원금을 초과해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반면 반발도 적지 않다. 앞서 도내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등은 지난해 말부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형평성 △사업 추진 전 공론화 과정 전무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사업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건전성이 확보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국전교조강원지부정책실장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전면 도입, 관리 중에 있어 예산과 달리 관리에 허점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민영

2023 05 04 ()
21

江原日報

“도노인회관 건립 예산 반영 ... 어르신 복지향상 힘써야”

도노인회-김진태 지사 간담회
강릉 산불 피해 복구성금 전달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이하 도노인회)는 3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김진태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노인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용 차량 교체와 임원진 워크숍 개최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2024년 당초예산에 강원도노인회관 건립 설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공공기관 등에 노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고 경로당 식사도 우미를 공공형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로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

도노인회는 특히 심시일반



◇이건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3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에게 강릉산불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모금한 산불 피해 성금 2,545만 5,000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인회 차원의 홍보 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건실 회장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강원도의 노인 복지 향상과 당면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데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대표해 도노인회 회장단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희기자

2023 05 04 ()
01

강원도민일보

강특법 ‘마지막 기회’ 10일 공청회에 달렸다



김교홍 소위원장 “10일 진행”
도·정치권, 원포인트 타결 집중
행안위 소위 조속처리 최선 불구
타 법안 우선순위 심의경쟁 치열

2 강원도·도정치권 협상력 시험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은 ‘운명의 한 주’를 남겨놓고있다. 기회는 다음주로 예정된 공청회 딱 한 번뿐이다. 공청회는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강원도 입장에서선 1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 김진태 지사와 강원도 정치권은 시험대위에 서있다. 그러나 강원도를 둘러싼 정세는 녹록지 않다. 도와 정부부처간 규제개선 특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공청회 개최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총 5단계 입법 절차를 향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홍(민주당)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특법 개정안 공청회는 오는 10일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행안위는 강원도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제정법부터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개정안까지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처리해 왔다”며 “이번 전부개정안 역시 심의 일정을 앞당기고자 최대한의 노력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도정치권은 초긴장 상태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름만 바뀐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규제완화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여부가 결정된다.

공청회에 올려질 최종안은 내주 초에 마련된다.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도지휘부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은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와 도정치권은 정부 각 부처와 협상을 이어가면서 공청회를 비롯해 소위 논의 일정까지 ‘원포인트’ 타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송기현의원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함께 활동하면서 여야 대표에게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 관철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것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우선순위의 심의 경쟁이다. 지난달 19일 공청회를 마친 충북도의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음 소위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논의에 있어 우선순위 경쟁이 또 다시 펼쳐진다면 자칫, 강특법 개정안 5월 입법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무쟁점 법안’인 강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 협의안만 도출된다면 국회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는 의사일정 조율동안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발등에 불’ 김 지사, 한 총리 만나 5월 강특법 입법 재요청

위기의 강원특별자치도

한 “정부협의 막바지 잘 쟁길 것” 해외순방 앞 사실상 마지막 기회 일각 “원론적 수준 머물러” 평가

김진태 도지사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4대 핵심규제 개선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이날 언급한 답변은 지난 3월 말 지원위 회의에서 밝힌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지방안



김진태 도지사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4대 핵심규제 개선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접검 회의를 열고, 강릉 산불 피해 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당초 비대면 화상회의의 참석 대상이었지만 강릉 산불 피해복구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회의

에 참석했다. 이어 한 총리와 별도 면담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 총리는 4일부터 10일까지 해외순방에 나선다. 강특법 개정을 앞두고 한

총리와 만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인 셈이다. 김 지사 입장에서는 맘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한 총리는 이날 김 지사와의 단독면담에서 “정부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마지막까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쟁기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 3월 30일 강원도청에서 주재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각 정부 부처에 “기술발전 따라 규제 완화 방식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환경과 군사, 농업규제 완화 등에 대해 별도의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한 총리에게 “그간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부처협의에 진적

이 있었던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한 달 남았다. 행정부 설득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국회 심의라는 절차적인 상황, 정부 설득이라는 실제적인 상황을 동시에 해결해서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며 “국회 심의가 늦어져서도 안 되고, 개정에 담길 내용 또한 부실해서는 안 된다. ‘투트랙’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주어질 시간은 개정안 법안심사까지 일주일 정도이다.

강원도는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한 총리의 “잘 쟁기겠다”는 발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중에도 정부의 강특법 특례에 따른 규제개선 의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지은·이세훈

강원도민일보

전국 17개 시·도지사, 강특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 촉구

성공출범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속보=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본지 5월 3일자 3면)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이철우 경북지사·이하 협의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가 균형발전을 이루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에 앞장설 것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및 각종 규제완화 등을 시

범적으로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날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 채택은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55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제안해 성사됐다. 이철우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7개 시·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지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동료 시·도지사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공동 결의문은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17개 시·도 전체가 잘 살기 위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남궁창성

2023 05 04 ()
14

강원도민일보

평창군 43개 농수산물 미국 수출길 올랐다

3만2000달러 규모 수출 선적식
강원 특산물매장 '감자바우' 판매
"해외 수출시장 개척 더욱 박차"

평창군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품이 3일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갖고 미국내 강원도 특산물 매장 '감자바우'에서 판매된다.

이날 진부면 부일농산에서 선적된 평창산 농수산물품은 군내 구수담 영농조합법인의 황태양념구이, 대관령 눈마을황태의 황태채와 황태가루, 봉평농원의 메밀제품류, 봉평메밀특산



평창군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품이 3일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갖고 미국내 강원도 특산물 매장 '감자바우'에서 판매된다.

단지의 메밀냉식혜, 부일농산의 나또류, 오대산식품의 메밀차류, 농업회사법인우리두의 두유류, 평참팍이나 물류 등 지역내 8개 업체가 생산한 43

개 품목으로 3만2000달러 어치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평창 농수산물품은 미국 LA한인타운 내 크렌쇼 플라자 (Crenshaw Plaza)에 위치한 강원도

특산물 매장 '감자바우'에서 현지 교포를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감자바우'는 한국 특산물은·오프라인 할인매장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산식품을 LA한인 소비자들에게 중간마진을 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평창군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기도 했다. 군 농수산물수출협회 관계자는 "평창의 농수특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5 04 ()
12

"킹크랩을 반값에" 내일 동해항 크랩킹 페스타 개막

도·연해주 수산자원 상생포럼 개최

'2023동해항 크랩킹 페스타'가 어린 이날인 5일 개막해 7일까지 3일동안 크랩류 수입의 본산인 동해시의 추암에 위치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오호츠크·베링해 크랩류 최대 수입 관문인 동해항을 보유하고 있어 사계절 신선한 크랩류 소비가 가능한 이점을 살려, 동해항 주변 산업단지를 국내외 수산물의 저장·가공·유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러시아 북방외교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동해시가 주최하고 북방물류산업진흥원·동해문화관광재단·골드크랩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타는 5일 오후 4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한·러간 수산물 자원 상생방안 및

수산물 연계 산업 창출 방안을 주제로 '강원도-연해주 수산자원 상생포럼'이 개최된다. 오후 7시 30분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국내 교류도시, 러시아 무역사, 베트남 초청단 등 주요 내빈과 시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연으로 장윤정·김범룡·배일호 등 국내 정상급 가수가 출연하는 전국 TOP10 가요쇼가 펼쳐진다. 6~7일 트로트, 댄스·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과 래퍼 초청공연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예정이다. 행사기간 신선한 크랩류를 시중가의 절반 값에 판매함에 따라 관람객들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전인수

강원도민일보

2023 05 04 ()
09

춘천시 곤충산업 거점단지 공모 최종 선정

국비 100억원 확보 동산면 조성
공급체인망 체계 구축 가능 전망

속보=춘천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춘천시가 곤충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본지 4월 26일자 9면)에 최종 선정됐다.

춘천시와 강원도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곤충산업과 관련된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팜, 사료 제조시설 등 생산기반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위치는 동산면 조양리 일대 2.8ha 부지로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새로운 식량자원으로 식용

곤충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식용곤충은 풍부한 단백질과 무기질이 함유돼 있어 대체육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시는 축산업의 탄소배출이나 약취 등의 문제도 식용곤충을 통해 만든 대체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와 시는 그동안 풀무원과 곤충식품산업 업무협약을 체결, 곤충 단백질을 활용한 미래식품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팜 기술특허 등 5가지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자체 경쟁력도 갖췄다.

또한 한미양행 등 식품기업과 국내 그린바이오 업체와 연계한 원료 안정

공급처도 확보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현재 곤충산업은 농가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담하는 구조지만, 거점 단지를 조성할 경우 스마트 팩토리팜을 통해 기업참여와 기업구매까지 이어

지는 공급체인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육동한 시장은 “도와 시가 계획부터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지역 핵심산업인 바이오, 디지털과 연계해 곤충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 05 04 ()
/ 17

학대·차별관행 반성 계기로

-가족행사 많은달, 경제침체기 사각지대 챙겨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등 가족에서 치르는 행사가 이어집니다. 청소년의달이어서 19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인천에서 열리고,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소년위원회 발족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원도내 곳곳에서 가족단위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는 더 큰 소외감을 가질수 있는 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시에 가족 구성원과 관련한 복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시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과제를 도출하고 대책을 세우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이 피해를 보는 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때 문입니다. 특정 지역 및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과 긴밀한 공립 복지시설 부족 및 프로그램 미흡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통해 18개 시·군 중 특히 동해·삼척시에서 치료를 동반하는 장애인 전담 공립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강원도내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치료를 병행하는 방과 후 수업 및 돌봄공적시설 없는 탓에 사설기관을 이용하

느라 대기자가 넘치고 사교육비 부담에 가계가 휘청이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한자폐아를 둔 부모는 사설교육기관 등 이용비로 매월 160만원이 지출된다는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폭력과 학대 문제는 현안으로 등장한 지 오래됐어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교내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문제이지만,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도외시한 채 방치와 구타로 끝내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기 처방의 반복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저변에까지 뿌리박힌 나쁜 관행입니다.

강원도내 시·군엔 3년 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36명이 배치돼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보호계획 수립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장 경험이 사례 공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보완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연중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원에 대한 안전관리수당 확대 및 자녀 인권 캠페인 등을 계획한 속초시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심도시' 사업은 권장할 만합니다. 경제침체기에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대상 범죄가 잦을 수 있기까지 자체와 자치경찰은 비상한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04 ()
/ 17

군부대 해체지역 활성화 대책을

-영서 접경지 이어양양8군단도... 대안절실

강원 영동지역 등 동해안 안보를 책임졌던 육군 8군단이 올 하반기 해체합니다. 지난 1987년 4월 양양군에 창설된 8군단은 이로써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임무 해제된 군단은 6월 말까지는 부대명을 유지하고, 현 군단 사령부에는 양양군 강현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옮겨옵니다. 그동안 대민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부대가 해체되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양뿐 아니라 도내 접경지역도 주둔지 부대 해체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양 주민들은 해안 안보와 지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해변은 완충지대가 없는 접경지입니다. 22사단과 23경비여단, 102기갑여단 등으로 구성된 8군단은 동해안 6개 시·군에 이르는 긴 해안을 담당했습니다. 육상 30km, 해안 70km 등 100km에 달합니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 GP와 GOP 등 전방은 물론,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았습니다. 더구나 부대 장병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큰 행사는 물론, 대

형 산불과 폭설과 태풍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민 지원에 앞장서 주민들의 아쉬움이 큼니다.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대가 없어졌던 접경지의 경기 위축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체됐던 육군 27사단 주둔 지역인 화천군 사내면은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군인 고객이 많았던 업소 등 상가와 상인들은 한둘씩 지역을 떠나고, 면회객들이 이용했던 숙박업소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내 접경지역의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군부대 해체와 함께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는 20대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군 첨단화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접경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군부대 부재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소외됐던 주민들이 생계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내 접경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기대합니다.

江原日報

2023 05 04 () / 19

18개월 만에 물가상승률 3%대, 체감할 수 있어야

강원도 내 물가상승률이 18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강원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6(2020년=100)으로 1년 전에 비해 3.7% 올랐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국제 석유 가격 안정화에 따라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5.0%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내 물가 산정 시 석유류 가중치가 크다 보니 전체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경유 가격이 19.2% 급락했고 휘발유 값과 자동차용 LPG 값은 각각 17.3%, 14.6% 내려갔다. 도내 교통 물가 역시 7.1% 떨어졌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악재가 곳곳에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민들은 물가상승률 둔화보다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예고에 더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전기·가스요금은 애초 지난달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권의 제동으로 미뤄진 결과다. 계속 누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나서면 물가 전반에 주는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도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추가 감산을 결의한 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하반기

기 원유 수요는 더 늘 수 있다. 개인서비스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달 외식물가가 7.6%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신선식품물가지수는 4.8% 각각 뛰었다. 식자재 값 급등에 따른 외식비용 상승은 여전히 가파르기 때문에 서민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외식업체가 인건비·재료비 등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2%)와 아직도 거리가 있다. 물가 상승 폭은 다행히 둔화 추세이지만 체감은 쉽지 않다. 피부에 와닿는 외식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서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는 장기화될 수 있다. 임금 상승은 제한적인데 물가를 잡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당국은 상고하저 낙관론에 매달리지 말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지속적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물가를 자극할 포퓰리즘 선심 정책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물가 시대 합리적 소비 문화도 정착돼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3 05 04 ()
/ 19

특별자치도, 정치 논리로 나눠 먹기식 돼선 안 돼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우후죽순 추진하면서 부작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가운데 전라북도, 경기 북부 등 타 지자체들도 ‘특별자치도’로 진입하기 위해 치열한 입법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3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전북교육감, 전북 국회의원 등 260여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국회 입법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

서 경기도에서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기반 조성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경기북부특별

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 세종, 강원 에 이어 전북, 경기북부까지 가세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자칫 ‘특별함’을 잃고 정치 논리에 따른 ‘나눠 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그래서 제기된다.

전북특별법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 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특별법과 거의 모든 조항이 동일한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나 다름없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지리적, 지역적, 산업구조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

른 여건을 갖고 있으나 특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 의 아니게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다. 또 경기도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어 지역 간 안배와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의 특례 확대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다른 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특별한 대책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통과되느냐다. 강원도가요

구하고 있는 규제 개혁이 현실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안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이 역할을 해 줘야 한다. 더욱이 입

제주·세종에 이어 강원도 6월 출범

전북도·경기북부 가세 ‘우후죽순’

지역 간 안배·균형 고려 시 ‘취지 무색’

법 과정은 험난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씨는 2일 오후 늦게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5월 첫째 주 공청회를 열고 이후 법안소위, 전체회의 등의 순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5월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정부부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원도와의 특별자치도 특례 협의가 타 시·도와의 협상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 즉,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정부부처는 ‘특별자치도’의 시발점이 될 강원도와의 협상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타 시·도에도 적용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서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빈틈 없는 공조와 논리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